

미중 무역분쟁의 본질과 정책적 시사점

2019. 8. 6

김영한

(성균관대 경제학과)

I. 미중무역전쟁의 추이와 그 배경

< 미중 무역전쟁 최근 추이 >

- 2018년 3월 22일, 트럼프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% 관세부과 결정으로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은, 결국 최근까지 점차 격화
 - 2018년 중국의 대미수출은 약 5400억 달러, 미국의 대중 수출은 약 1200억달러
 - 최근 G20에서의 무역전쟁 휴전 후, 지난 8월 1일,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추가 30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위협으로 결국, 양국의 총 교역액에 보복관세부과 예정
- 관세전쟁에 더하여, 미국은 화웨이 등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, 중국도 유사한 형태의 미국 기업규제 가능성 증대

<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영향 >

- 역사상 최악의 Chicken Game 형태의 무역전쟁으로 확산 가능성 증대
- 기존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붕괴 위기
 -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해온 근간인 Bretton Woods System 전반의 붕괴위기:
- Rule-Based 다자주의체제 →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양자주의
- 기존의 Global Value Chain System의 붕괴 초래
 - "Efficiency Maximizing Value Chain → Risk Minimizing Value Chain"
(Shorter & Regional Value Chain)
- Viral learning Effect: 최근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및 무역보복조치
 - 정치논리(Ex: 일본평화헌법 개헌목적)가 경제논리를 압도

<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>

1) Hegemonic Conflicts replacing Rule-based global governance system

○ Thucydides Trap? (Allison 2017)

- Fear of a newly rising power might ends up with physical conflicts
- The Spartan fear of the rising Greece → Peloponnesian War
- German challenge to UK in the late 19th century → the end of the first era of globalization → WWI
- Confrontation between rising China and the US → A new Cold War?

O Kindleberger Trap?: Global Public Goods Provider:

G7 → G20 → G2 → G0 → ' - G2'

- Pre-requisite for Global Economic Stability: Global public goods (such as open markets for trade, adequate lending to debtor countries, and the provision of needed liquidity in the face of financial crises.)
- In 20's & 30's: The unwillingness of the US (replacing the faltering leader, UK) to provide the global public goods → the Great Depression
- Currently, (with the US giving up the leadership), China not yet able and willing to provide the global public goods → Another global Depression?

2) 미국 국내의 기형적인 구조적 문제점 누적:

< 소득재배분 및 자원재배분정책의 실패 >

- 미국내 빈부격차 심화와 White Blue color workers의 실업 급증 및 실질소득감소 (미국 제조업노동자 하위 80%의 실질소득은 45년 전(1974년)과 동일)
 -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와 세계화의 결과, 미국내 단순제조업 일자리의 급감 및 단순제조업의 임금 하락
- 비교열위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재교육하여, 비교우위부문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의 의무
 - ➔ 미국정부는 과거 레이건 시절부터의 왜곡된 신자유주의적 접근의 강력한 영향이 클린턴 및 오바마 행정부까지 그림자를 드리우며, 지속적인 사회복지지출의 감소 및 비교열위부문인 단순제조업 부문에서의 실업자들을 방치 ➔ 사회적 불만 및 분노가 누적

➔ (소득재배분 및 무역조정정책 등의 자원재배분정책의 실패 및 붕괴의 결과 초래된) 사회적 불만과 분노를 활용하여, '외국인노동자 유입과 자유무역'에 화살을 돌리는 트럼프 등 선동주의적 정치인의 득세 및 집권

(← 합리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White Blue color workers들을 양산한 실패한 공공교육도 그 원인 중의 하나 ← 공화당정권의 교육재정삭감)

○ 효율적인 소득재배분과 무역조정정책 등 자원재배분정책이 실패한 국가들: 예외없이 극우파 Populist정치인이 집권하여 보호무역정책과 반이민정책을 추진 (Ex: 영국, 헝가리, 폴란드 등)

3)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의 배경: 초연결사회의 도래

○ 기하급수적 기술혁명 → 0 physical transaction cost (communication & transportation costs)

→ Hyper-connectivity → 전세계적 기술표준화

→ 전산업에서의 독과점화 가속화 → 전지구적 소득불균형 및
기술불균형 가속화 (unless coordinated redistribution system works)

	PC era	Internet era	Mobile era	Hyper-connected era	
Time	'90's		'00's		'10's
Society	Information Society		Ubiquitous Society		Hyper-connected Society
IT technology	PC, DB	WWW, High speed internet		Mobile Internet, Smartphone	IoT, M2M, Big data
IT role	PC, OS	Portal, Search Engine	SNS, App services		Context-aware services, intelligent forecasting

○ 초연결사회에서의 경제구조적 특징: 'Winner Takes All'

i) Hyper-connectivity and industrial concentration

ii) Hyper-connectivity & economic polariz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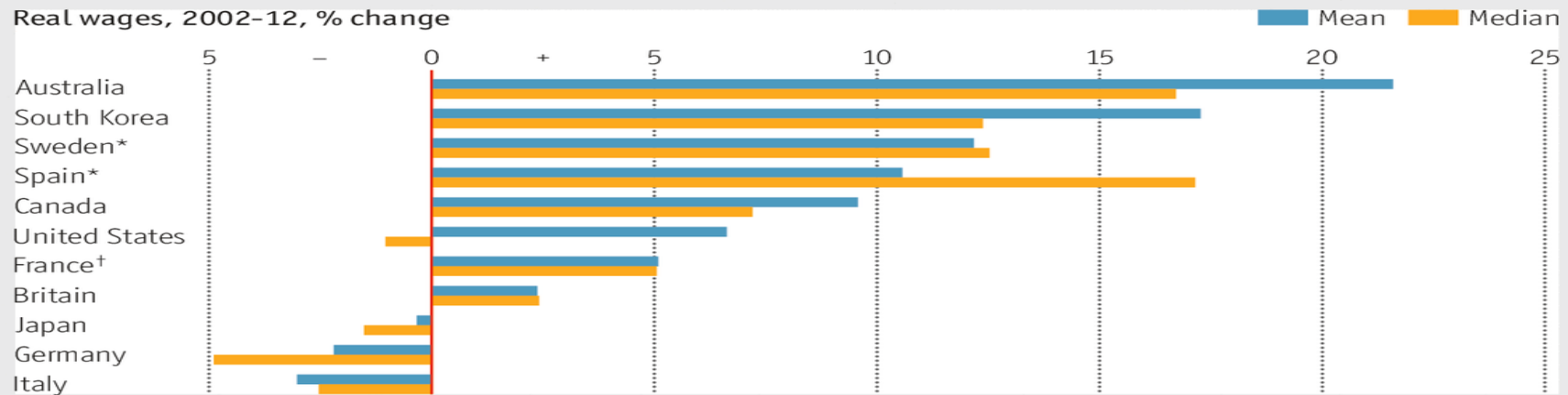
iii) Hyper-connectivity & homogenized consumer preferences and production technologies

The Collapse of the Middle Clas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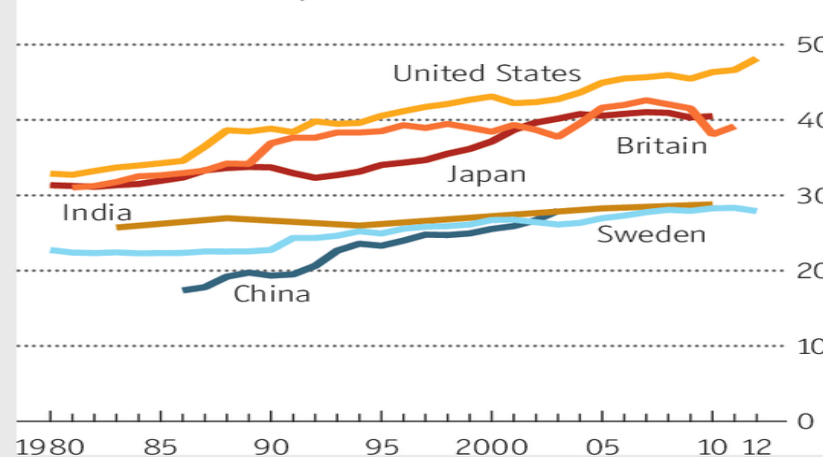
2

Get used to it

Real wages, 2002-12, % chang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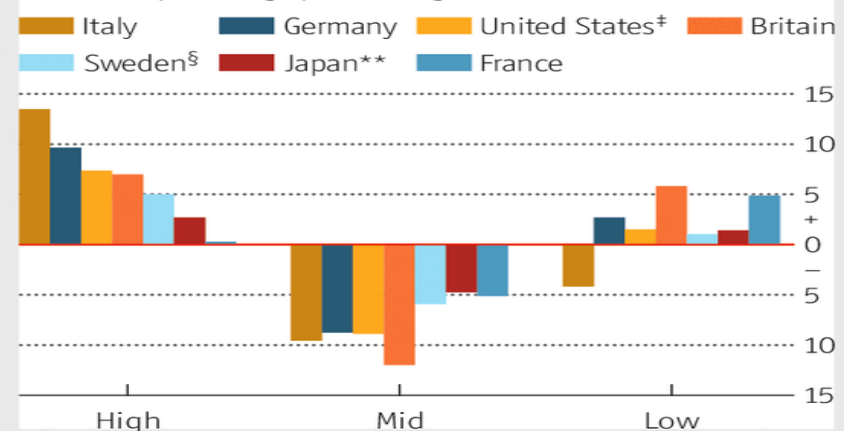
Income share of top 10% of earners, %



Sources: OECD; World Top Incomes Database; World Bank; ILO; BLS; *The Economist*

Share of employment by skill level

1992-2010, percentage-point chang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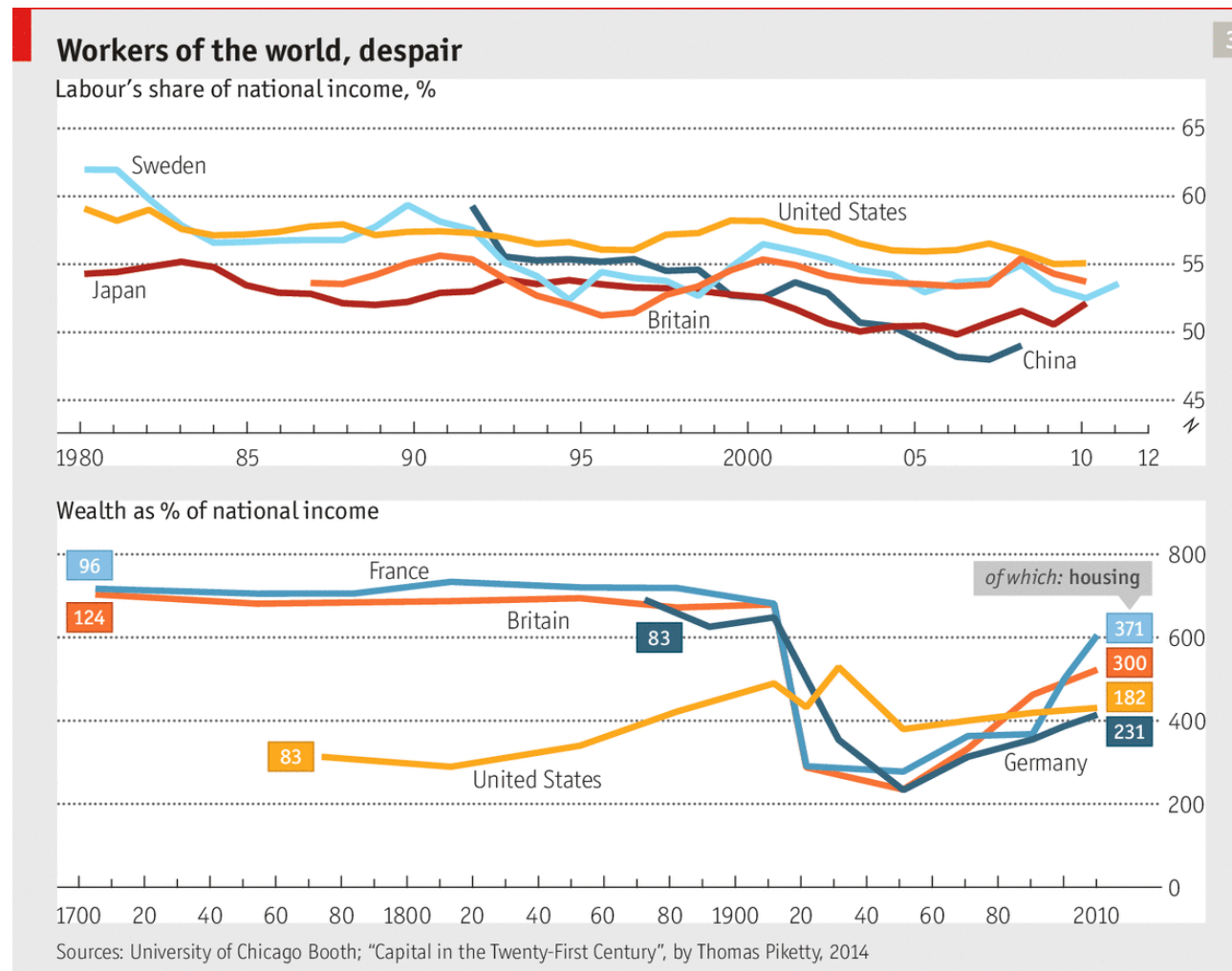


*2004-12

†2002-10

‡Estimate based on two series
§1997-2010 **1990-2008

Labor income dwindled



O No solution, but the apocalypse as the Trump-driven USA???

- 초연결사회를 도래시킨 기술혁명과 세계화 추이에 필수적인 '적극적인 소득 및 자원재배분 정책'에서 실패한 사례: Populist에 맡겨진 실패한 시장주의국가들 (Trump-driven US & Brexit-driven UK)
- ➔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의 benefit 실현은 노동력과 resources의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소득재배분 및 자원재배분정책을 통해서만 가능

II.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및 전망

<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 및 전망 >

- 미중무역전쟁을 시작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푸틴, 시진핑, 김정은 등이 누리는 권위주의적 독재자 위상을 선망하고 있으나,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미국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이익극대화전략으로 판단
- 트럼프의 절대적 지지층인 White Blue Color들의 지지가 이어지는 한, 중국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나, 미중무역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백인노동자들에 의해 체감되는 시점에는 정책노선변화 가능성 높음

- 미중무역전쟁 → 소비자 및 중간재의 수입단가 상승
 - ➔ 소비자 물가상승 및 기업의 생산단가 인상 (향후 1~2년내 현실화)
 - ➔ 국내 소비자 및 기업들의 불만 및 비판 증가에 따른 정책노선 변화 (늦어도 향후 3~4년 이내)

<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 및 전망 >

- 미중무역전쟁의 발단은 막대한 중국의 대미무역흑자에서 시작했으나, 구체적인 요구사항은, 중국의 국내경제정책의 수정 요구로 나타나면서, 미중간 무역전쟁의 봉합이 이루어지지 못함.
-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단을 포함한 인위적 산업정책 중단 (즉 '중국제조 2025'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), 서방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적 기술이전강요 중단

-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수입관세압력으로 시진핑이 국내정책수정을 수정할 가능성은 전무 (시진핑도 2022년 주석 재선임 절차 등의 국내정치적 고려가 무역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)
- 향후 중국 고유의 모순적 정책마찰 dilemma는 확대될 전망
 - i) 중국경제 고유의 구조적 문제점 (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의 과잉부채문제 및 국영은행의 과잉부실채권 문제) 해소를 위한 시장경제원리 확대정책과
 - ii) 미중무역전쟁 및 국내경기위축에 대응한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 및 확대금융정책 추진 등 공산당 및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정책간의 근본적인 정책마찰은 확산될 전망

< 글로벌가치사슬(GVC)에 미치는 영향 >

- GVC의 확장세 중단 및 단절화 → 잔존 GVC는 더욱 짧아지고, regionally & politically centered & motivated
 - GVC: No more cost-motivated, but political factor-biased GVC might be prevalent
- 중국 중심의 생산제조기지전략 → 베트남 등 동남아와 인도 및 멕시코 등 중남미로의 생산기지 확산전략
 - 단기적으로는 산업인프라와 노동생산성 차원에서 급속한 이전에는 한계
 - 향후 보호무역이 확산될 경우 → Production at the market with shortest and regional value chains

<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미칠 영향 >

○ WTO 체제의 무력화

-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WTO 가 중국의 불법적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력한 기구라고 비판
- 또한 WTO 의 무역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미국 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 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WTO 상소 기구(appellate body)의 panelist 임명을 거부 ➔ 분쟁해결기구의 무력화 기도

<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Leadership 실종: G 0 시대 → G -2 시대 >

- 미국과 영국이 보호주의정책으로 회귀하면서,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Leadership 공백상태
- 중국, 독일,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있으나, 중국의 경우, 서비스시장의 폐쇄 및 산업전반에 걸친 보호주의 정책에 기반한 관리무역체제로서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할 여건 미비
- * 독일 역시 OECD국가 중 GDP대비 가장 높은 무역수지 흑자폭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극도로 억제하여 무역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, 일본 역시 비협조적 환율조작 정책 등으로 비판 받고 있음.

<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→ 힘의 논리에 의한 양자간 통상관계로 재편 >

○ 미국 트럼프행정부: WTO를 통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부정

➔ 모든 통상의제 및 갈등을 힘의 논리에 의한 양자간 협상으로 해결추진

Ex: TPP 탈퇴 이후, 미일 양자간 FTA추진,

TTIP 거부 이후, 미영 양자간 FTA추진 등

○ Trump의 시각: 자유무역은 win-win game이 아닌 zero-sum game

➔ 중상주의적 접근: 미국에 대하여 무역수지흑자를 보이는 모든 상대국을 불공정무역국가로 규정 & 무역수지적자 축소를 위한 강제조치를 공정무역조치로 묘사

< 통상협정 無用論 >

-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, 미국 국내법을 근거로, WTO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은 물론, 한미FTA와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무시하고, 무차별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남발
- 미국의 국가안보(통상법 232조)를 근거로 한 무차별적 보호무역정책은 기존의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협정을 무효화
- 이와 같은 미국의 초국제법적 보호무역조치와 중국의 꾸준한 WTO규정위반으로 통상협정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음.

< 미중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>

-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정책의 확산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증가
 -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도, 골수지지층의 정치적 지지확보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 추이가 더욱 강화될 전망
- * 기존의 반덤핑규제 등의 조치에 더해서, 레이건 정부시절의 과격한 보호주의정책 (자유수출규제(VER), 자율수입확대(VIE)을 선택할 가능성
- 중장기적으로 수입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 +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하락 + 기업들의 생산단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초래
⇒ 장기적으로 '미국 소비자후생악화 + 미국기업 경쟁력 약화'로 이어져 그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책으로 평가됨.

- 'G -2' 상태에서, 미중간 무역전쟁 장기화 및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붕괴에 따른 거대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,
 - i)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갖춘 기업 및 국가경제는 오히려 그 시장지배력이 커질 수 있으나
 - ii)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국가경제는 시장퇴출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임.

- 현재 국제가치사슬(GVC)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거의 상실한 한국경제에게 미중간 무역전쟁 장기화와 다자간자유무역체제의 붕괴는 곧 한국기업 및 한국경제의 퇴출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III. 정책적 시사점

< 미중무역전쟁 (G-2) 시대의 한국의 신통상정책방향 >

- i) 단순FTA중심의 특혜적 시장접근기회 확보전략 → 다자주의(WTO)체제 복원을 통해 경제환경 안정화전략
- ii) 지속가능한 통상정책으로서의 포용적 통상정책 (Inclusive Trade Policies)
 - Domestic Inclusive trade policies: 비교열위산업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+ 사회안전망 강화정책
 - International Inclusive trade policies: 시장개방+적극적 기술이전지원
- iii) 단순시장접근기회 확대전략 →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(Strategic Trade Policies to upgrade economic efficiency)

- i) **통상정책목표와 수단의 외연확대:** 단순FTA중심의 특혜적 시장접근기회 확보전략 → 다자주의(WTO)체제 복원을 통해 경제환경 안정화전략
(← 미국의 양자주의 접근에 의한 통상불확실성 감소 필요성 증대)
-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복원은 필수적
 - **복수국간 통상체제(Plurilateral Regime) 및 Mega-FTA의 전략적 활용**
⇒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복원기반 마련 필요
 - RCEP을 통한 복수국간 시장개방논의를 활성화하고, 미국을 제외한 CPTPP협력논의 확대는 슈퍼파워의 통상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 기대

○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적 리더쉽 발휘필요

-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DDA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복원과정에서,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행사할 필요
-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Leadership이 실종된 상황에서,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통상갈등을 중재하고, 다자간 협력체제 복원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상황을 활용할 필요
- 국가안보(Ex:미통상법 232조) 및 산업피해(Ex:미통상법 201조)를 빌미로 한 무차별적 보호무역조치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논의 주도 필요
- '반덤핑규제 및 보조금상계관세규제의 오용방지' 및 '지적재산권 보호강화'를 위한 국제규범도입 논의도 주도할 필요

ii) 지속가능한 통상정책으로서의 포용적 통상정책 (Inclusive Trade Policies)

○ Domestic Inclusion: “비교우위부문+비교열위부문”의 동반성장을 위한 포용적 통상정책 필요: 비교열위부문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무역조정 지원체계를 범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정책과 연계하여 구축필요

- ‘무역이익공유제’와 같은 임의적인 반시장적 조치 지양 ➔ 시장퇴출 위기에 직면한 모든 비교열위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재배치를 지원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필요

- 사회통합과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하여,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통상조약 체결의 사후적인 불만무마정책이 아니라, 비교열위부문 노동력의 비교우위부문 재배치를 위한 사전적 산업구조조정정책으로 전환할 필요
 - 포괄적 무역구조조정정책의 범위를 통상조약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산업지원에 국한하지 않고, 비교열위부문 노동력의 고부가가치 비교우위부문으로의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정책으로 확대할 필요

- International Inclusion: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발전지원 필요: 2001년 이래 교착상태인 DDA 부활의 모멘텀으로 국제적인 전략적 기술이전노력 주도필요 → 다자주의 체제복원의 국제적 리더쉽 발휘 계기조성

iii) 단순시장접근기회 확대 →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(Strategic Trade Policies to upgrade economic efficiency)

- 주력산업 및 신산업기술경쟁력제고와 경제효율성제고로 이어지는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통상정책의 전략적 접근 필요
- 산업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영토(시장접근기회) 확보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악영향 (Ex: 멕시코, 페루, 칠레)
- 향후 추가적인 FTA협정 및 시장개방협정은 물론, 기존 FTA의 이행협약과정에서도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

iv) 한국기업의 GVC 전략 재편 필요

- 미중무역전쟁 확산시, 한국기업의 중국중심의 생산전략 → Market-centered production 전략으로 전환 필요
- 단순비교우위중심의 특화를 탈피 →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공정중심의 GVC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 (← 최근 일본수출규제를 통하여, 기존의 단순 비교우위중심의 GVC 전략의 총체적 실패 재확인)